

〈제 615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설 맞아 중소기업 특별자금 5천억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천억원을 편성해 2월 26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해 민생안정 대책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발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채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진종합건설

◆ 전남대 발전기금 2억5천만원 기탁



영진종합건설 박승현 회장 부부는 지난 7일 전남대 정병석 총장을 예방하고, 대학발전기금으로 2억5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승현 회장 부부는 “사업을 시작한 지 40년째인 지금까지 나눔을 소명으로 삼아왔는데,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목표를 비로소 이루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동문과 지역기업인들이 전남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부 대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전남일보 2020년 12월18일 금요일

와이드 인터뷰

I 7



김형순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대담=김기중 편집국장

“고객·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 도약”

약력

- ▲ 영광 출생
- ▲ 금호고 졸업
- ▲ 전남대 화학공학과 졸업
- ▲ 전남대 대학원 졸업
- ▲ 전남대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수료
- ▲ GS 칼텍스 생산기획팀장
- ▲ GS 칼텍스 생산부문장(사무)
- ▲ GS 칼텍스 대외협력부문장, 생산 1, 2 공장장
- ▲ GS 칼텍스 프로젝트추진단장(전무)
- ▲ 광주전남연구원 발전전문위원
- ▲ 광주경제지총협회 부회장

“학회-기업 공조로 탄소 제로 기여”

김형순 대표, 화학공학회장 당선 지역출산·중견기업 CEO 첫 선출

김형순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새해부터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장 회장직도 함께 수행한다.

김 대표는 “2021년도 한국화학공학회장 회장을 하게 된 것이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감회가 남다르다. 지방대 출신이며, 중견기업의 CEO가 회장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처음일 것”이라며 “화학공학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점차 열린 사회로 변하고, 학회도 그런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쁘다. 제가 그 출발 선상에 있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1962년 설립된 한국화학공학회는 8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 한국화학공학 분야 최대 학회다.

김 대표는 “저의 학회장 선출이 긍정적 선례이자 표본인 만큼 학회의 역할에도 다변화를 추구하겠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대기업 위주의 업무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학회가 교류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동반성장하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정치와 분리된 학술 집단이지만 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며, RE 100(재생에너지 100%)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학회와 기업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탄소 제로, 기후 온난화 방지, 신재생 미래 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원 기자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위험을 찾아 제거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김형순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2017년 취임 이후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한창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 현장에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혹시 모를 도시가스 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 순찰차량에 스마트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주)해양에너지를 지역 대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일문일답.

- (주)해양에너지를 소개한다면.

(주)해양에너지는 1982년 설립 이후, 광주 및 전남도 8개 시·군에 친환경 청정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외에도 가스 냉난방기 보급, 태양광·연료전지 발전 및 보급, 수소충전소,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고객 및 회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자체 IT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수익성 기반의 신규 사업 확장도 모색 중이다.

- 지난해 해양도시가스에 (주)해양에너지로 37년만에 사명을 변경했는데.

△기존의 해양도시가스라는 사명에서는 ‘도시가스사업’ 또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됐는데, 도시가스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해양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했다. 또한 사명인 ‘해양’은 광주, 전남지역의 고려시대 옛 지명으로서, 회사가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께 담고 있어 이를 함께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대표이사 취임 후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회사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도시가스 사업을 넘어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구성원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켰다.

또 공급권역이 확대된 도시가스 사업의 특성상, 과거 고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에서 탈피해 고객과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플러스의 이익을 드리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



김형순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가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전남 8개 시군 가스 공급...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 개발 연료전지·수소 생산까지 추진... 원스톱 모바일리티 시스템 구축 도시철도 2호선 ‘안전 4중 방호벽’ 구축 등 안전·무사고 최우선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 것을 가장 뜻깊게 생각한다.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개발했으며, 서부발전과 함께 회사 부지 내에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수소 생산까지 구축사업 등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성과로 꼽고 있다.

- (주)해양에너지의 경쟁력은.

△해양에너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38년간 75만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쌓아온 신뢰일 것이다. 또한 투명한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건전한 재무구조 및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프라이드를 가진 해양에너지 임직원과 함께 어려운 경영 환경의 변화와 도전 도 이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주)해양에너지만이 제공하는 차별화 된 고객 서비스가 있다면.

△해양에너지는 2019년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도시가스업계를 선도하는 안전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고민하며 노력해 최근에는 도시가스 배관 순찰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네비게이션 시스템인 ‘SR Plu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모바일리티 시스템(HY-CS, S-RMS, SR Plus 등)을 개발해 모든 직원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

△도시철도 공사과 관련 도시가스 무사고 달성을 위한 ‘안전 4중 방호벽’을 구축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유령현차 및 안전관리 경력 15~20년 된 전담자를 현장에 배치해 주야간 안전순찰을 하고 있다. 이어 관찰카메라와 원격 차단밸브,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상황실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해양에너지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합동감시·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굴착 전 전담자 입회 의무 등 위험요소별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이고 예측 가

능해야 한다. 그라야만 관련 산업이 시기를 갖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당장 원전의 가동을 줄이게 되면 전력 수요관리 측면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그 대안으로써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연료전지 발전을 비롯한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도 꾸준히 일관성을 유지해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마을에 소규모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

- 수소충전소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6개의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광주시와 적극 협력하며 추진 중이다. 현재 해양에너지의 광산 CNG충전소에 국내 최초 북방 충전소인 ‘동국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일일 70여대의 수소자동차가 충전하며 상업 운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무 CNG충전소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설 중으로 12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도 공용 차고지 내에 위치한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 생산까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해양에너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최신 IT기술을 적용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고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양에너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AI(인공지능) 및 4차 산업 육성 사업에의 블루 이코노미 등 지역 현안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는데 미력하거나나 힘을 보태겠다.

정라·박성원 기자



1. 노사 동향

■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 발표를 통해 고용 위기 극복 의지 표명

○ 대통령은 1. 11 2021년 신년사에서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발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 1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7대 정책과제 제시

※ 7대 정책과제 : ①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창출, ②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대, ③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④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질서 확립, ⑤ 산재예방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⑥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현장안착, ⑦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공정한 일자리 기회 확대

○ 한편, 경총은 대통령의 경제회복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내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는 입장 표명

■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후속대책 추진을 통해 기업경영 여건 개선 촉구

○ 경영계는 지난 1.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경영 부담 우려 입장 표명

- 경총은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채 의결된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또한, 경총은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II. 노사 및 판례동향

경영계 입장 개진, ▲법 제정에 따른 기업 현장 애로사항 실태 파악 및 관련 부처 건의, ▲법률 해설서, 매뉴얼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통해 시행령 제정 대응 및 산업계 지원책 마련 예정

○ 양노총은 1.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반대 성명 발표

-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 ▲공무원 처벌 삭제 등에 대해 반대 입장 발표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투쟁 예고

2. 판례 동향

회사가 조합원들을 대리하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효력도 가짐(서울중앙지법 2021.1.8. 선고, 2017가합585002 등 판결).

1. 사실관계

- 피고(이하 ‘A사’)는 베이커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이하 ‘가맹점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A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10개 법인(이하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사업자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제빵/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A사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후, 2017.9.28. 제빵/카페기사를 불법파견으로 보고 아래와 같은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함.

위반 법조항	시정지시 내용
파견법 제7조제3항	▶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제빵/카페기사 5,227명을 직접 고용하고 시정결과 제출
파견법 제6조제2항	▶ 2년을 초과한 기간을 파견받아* 사용한 카페기사 114명 (2017.10.12. 이를 82명으로 정정)을 직접고용하고 시정결과 제출 ▶ 2년이 초과되지 않은 기간을 파견받아 사용한 카페기사 37명 (2017.10.12. 이를 69명으로 정정)을 직접고용할 것을 권고

* 협력업체 중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었음.

- 2018.1.11. A사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 식품산업노동조합, 일부 시민단체 및 정당과 함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빵/카페 기사 고용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함.

II. 노사 및 판례동향

[합의(서)의 주요 내용]

- ▶ B사(A사의 자회사, 이하 ‘자회사’)의 주주 구성은 A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협력업체는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한다.
- ▶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미 체결한 직원은 신규계약서로 체결 한다.(12월 급여 인상 소급 적용)
 -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
 - 노사간 합의 완료 시까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 계약 활동은 잠정중단한다.
- ▶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 한다.
 -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A사와 동일 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 한다.
- ▶ A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A사가 부담한다.
- ▶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원고들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이 사건 시정조치 직후인 2017년 12월경 A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 및 A사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들은 이후 2018.1.11.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았는바, 금번 판결은 이 사건 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됨.

2. 판결요지

○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한 경우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되어야 하나(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 취하 합의의 경우에는 조건 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참조).

○ 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A사의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A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복리후생을 보장받는 대신 A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조건부 소취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II. 노사 및 판례동향

- 이 사건 합의는 ▲(체결경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와 이행방안, 이 사건 소 계속 여부 및 소송비용 부담 주체 등을 논의하며 체결되었고, ▲(내용) A사가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 체결,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 소취하 및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정하였고, ▲(이행 경과) 실제로 A사는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자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함.
- A사가 2018.1.26. 노동조합에 신속한 소송 종결을 위해 원고들에게 실제 소송비용 이상의 금액 지급을 제안하는 취지로 아래 공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승낙이 없어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금전지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원고들의 소취하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취하 합의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2018.1.26. A사가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 주요 내용]

이 사건 합의의 체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6조의 세부이행조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오니 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취하하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 인원에 게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 한편, 법원은 설령 A사가 고용의사표시 의무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화해계약 이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화해계약)가 체결된 이상, A사는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합의로 정한 급여·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을 부담함.
- 나아가, 비록 원고들의 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화해계약) 이전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소취하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소취하 합의’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아 이전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한다고 밝힘.
- 금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가맹사업에 있어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안으로 다른 가맹사업자들의 관심이 주목되었으나,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각하 판단이 내려지면서 불법파견 인정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러나,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A사와 같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 조언과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가맹계약은 4자관계로 이뤄져 있어 업무 모습이 일반 도급 계약과 다른 등 일반 기업운영과는 성격 또는 양태가 매우 상이함.
 - 이에 가맹사업 분야의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가맹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노동관계법의 불법파견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끝.